



## 현장조사를 통한 개선 필요성 확인

친환경 정책

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건  
축물에 세부담 가중은 저탄소 정책에 반함

법적 명확성 부족

자동관리·제어에 대한 정의 및 세부 기준  
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



조세형평성 확보

녹색건축물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 
인텔리전트빌딩에는 가산율 적용은 불  
합리

보편화된 시설

최근 신축 건물들은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설치가 보편화되어 특수시설로 보기 어려움